

아셈 한국민간포럼 Korea People's Forum on ASEM / KOPFA

국내 연락처 : 참여연대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교동 175-87 인교빌딩 5층 전화 : 723-4255 / 팩스 : 723-5055 나우누리 GO PSD

현지 연락처 : 0171 354-0883 CIR

수 신 담당 기자
발 신 아셈 한국민간포럼(담당 : 참여연대 장소영 723-4255)
제 목 아셈관련 민간단체 대정부 로비활동 전개 및 제안
일 자 98. 3. 30 (총 5쪽)

아 셈(ASEM) 보 도 자 료 Ⅲ

유럽 각료 및 의회 사회포럼제안에 긍정적 반응

네덜란드 외무부 관리 아셈 내 사회단체와 정부가 주연하는 사회포럼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시 및 장소 : 유럽 각 개국에서 3월 26-30일까지

1. 민간로비팀, 네덜란드에서의 성과 :

3월 26-27동안 전개된 민간단체 로비활동 중 네덜란드에서의 성과로 아셈한국민간포럼이 제안한 사회포럼(Social Forum)을 아셈 내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 네덜란드 외무부 관리와 노동위 국회의원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회포럼은 복지, 노동, 여성 등의 부문의 사회단체와 정부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포럼으로 비지니스 포럼과 더불어 아셈의 한 축으로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단위가 될 것이다.

현재 아셈의 구성은 정상회담 아래에 경제각료회의, 외무부각료회의 한 축과, 정부와 기업인들이 함께 구성하는 비지니스 포럼 한축이 있다. 이 구조는 아셈의 3개의 축 정치적 대화, 경제적 협력, 기타 교류 중에서 있어 경제적 협력구조에 치우쳐 구성돼 있다.

이에 민간단체는 아시아-유럽의 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회포럼을 제안한 것이다.

2.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사회단체 결의:

아셈회의를 앞두고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콕에서 "사회적 정치적 축면에서의 아시아 경제위기"라는 주제로 3월 23-24일 동안 방콕 줄라라콘 대학에서 세미나를 가졌다. 이 국제회의에는 100여개의 아시아 단체들이 참석하였고, 회의 끝에 제 2차 아셈에 건의하는 민간단체 성명서를 작성하였다.

(성명서는 최근 아시아의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요인은 금융의 자유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근본적으로는 고도성장모델이 가져온 피해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IMF가 아시아에 요구하는 긴축경제 등의 프로그램은 아시아의 경제불황, 사회적 빈곤의 확대, 환경문제 심화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별첨1: 건의성명서 요약본)

“아시아의 경제위기” 이슈는 런던에서 열리는 3월 31-4월 1일 민간단체회의에서도 주요한 주제로 상정될 예정이다.

별첨 :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의 아시아 경제 위기” 국제회의 건의서 요약본

* 전문이 필요하시면 담당자에게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별첨 1>

아시아 국제회의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 본 아시아 경제위기”

1998. 3. 23-24 방콕 출라랑콘 대학

제 2차 아셈회의 건의문

최근의 위기는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위기이며, 국가경제를 무차별적으로 세계자본시스템에 통합시키려고 했던 모델의 붕괴를 의미한다. 이 위기의 직접적인 위기는 금융의 자유화에 대한 문제이다. 이 금융의 자유는 매우 유동적인 자금 흐름에 국가들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배경에 기인한 다른 근본적인 이유들도 있다.

현재의 위기를 낳은 고도성장모델(fast-track capitalism)은 다양한 형태의 외국자본에 극도로 의존하고, 높은 경제성장을, 수출시장 점유율 증가를 유도하며, 빈부격차의 심화, 성(性)차별, 지역적 편차의 심화, 자연자원의 급속한 고갈 등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 또한 이 모델은 생산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아닌 단기적인 이익에만 치중하는 금융 엘리트들을 출현시키고, 그들이 경제를 이끌어 나가게 한다.

긴축경제를 요구하는 IMF 프로그램은 진정한 문제들을 풀지 못하며, 오히려 그러한 문제들을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경제불황, 사회적 빈곤의 확대, 환경문제 심화 등을 야기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시기는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는 국가주도의 자본주의와 시장주도의 자본주의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은 거부한다. 대신 우리는 진정으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경제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 비전의 중심은 정의와 평등의 실현, 사회적 재생산의 중요성 인식, 공동체 보존, 환경보전 등이 경제적 효율보다 우위에 있는 가치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조절은 공정해져야 하며, 유동적인 국제자본흐름에 대한 자치권 행사가 필요하다. 정부나 시장 둘다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 경쟁에 기초를 두는 세계화 모델이 아닌, 정의와 평등,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에 기초를 둔 모델을 우리는 제안한다.

양자 택일에 놓인 경제

1. ASEM의 정부들은 국제 금융 흐름을 감시하고 조절하기 위한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또 제약기간(lock-in period)과 자금거래세(currency transactions tax)와 같은 투자를 제어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아시아에서 IMF 정책의 부정적인(?) 영향은 IMF 자금이 수요와 만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 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ASEM의 정부들은 IMF 집행부가 자금의 역할과 구조, 또 자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즉시 철저하게 재조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특히 의사결정과정, 투명성, 책임, 정책, 이상적인 수혜자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한편으로 쌍방 또는 다국적인 지원이 IMF 조건에 얹매여서는 안된다.

3. ASEM의 정부들은 즉시 모든 다국적 기업들의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엄격하고 합법적인 관리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그 목적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작업조건을 만들도록 하며, 지속적인 환경보전, 경제발전, 소비를 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윤의 일정 부분은 이러한 공동체의 참여에 의해 지역공동체와 국가, 지역경제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4. ASEM의 정부들은 보건, 교육, 공의사업 등 기존의 공공서비스분야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러한 분야에 대해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5. ASEM에 속해있는 OECD 국가들은 즉시 현재 OECD에서 협의되고 있는 투자에 대한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에 대한 저지를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투자의 자유를 국제무역기구에서의 협상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에 반대해야 한다.

민주주의와 인권

일련의 경제위기는 빈곤층이나 노동자들에게 키다란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경제위기는 또한 독재 정권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으며, 중요한 변화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세계화와 독재의 동시적인 위기는 우리에게 열린정치와 정치, 경제의 민주화에 대한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1.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투쟁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표한다.
2. 우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즉시 정치범과 감금자들을 석방하고, 그들을 복권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가 최근 정치탄압으로 실종된 사람들은 찾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3. 우리는 정부나 다른 기구들이 사회보장제도를 경제위기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확대하고, 이러한 보조금이 정권의 선전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기구에 의해 감시되도록 정책 공개를 요구한다.

동티모르, 베마, 티벳

1. 우리는 ASEM의 정부들이 동티모르, 베마, 티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즉시 발의(initiatives)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치들은 인권, 민주, 자결의 원칙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환경

1. 우리는 ASEM의 정부들이 화재를 진화하는데 즉시 연대행동을 시작하기 바란다.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는 각 국가들이 협력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의지를 입증할 것이다.

노동자들과 이민노동자들

1. 이민노동자들의 강제송환을 즉시 중단하라. 더 나아가 이민노동자들을 경제문제에 대한 희생양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이민노동자들로 인해 노동력이 분산되며 임금이 감소한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 또 이런 일들을 정부가 조작해서도 안된다.
2. 모든 국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영구적이고 강화된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해야 한다. 그 제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 실업보험, 의료서비스, 최저임금의 합법적 보장, 결사의 권리, 안전한 노동조건, 재교육, 실업시 취업알선 등. 노동자들을 보낸 국가들은 권리를 보호하고 외국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3. 아시아와 유럽의 국가들은 노동자를 보통 상품으로 보고 외국노동자들을 '사회적 문제'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그들의 시민이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인식되어야만 하는 주체이다.
4. 모든 노동자들은 그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형성에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필요조건은 독립적인 자유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이다.
5. 노동자의 저축을 회사자금으로 유용하고 외국빚을 갚기위해 쓰이는 모든 법령을 거부한다.

도시와 지방의 빈곤

1. 경제 축소를 유발하거나 빈곤 계층이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책들을 중지하라.
2. 재산과 수입의 재분배를 도시와 지방의 빈곤 문제의 중심적인 해결책으로써 인식하고 우선 사항으로 다루라.
3. 도시와 지방의 공동체의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종류의 잘못된 관행이나 발전 저해 요소들을 중지하라.
4. 빈곤 계층의 삶과 생계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의 결정에 그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5. 성공적인 발전 기획안 (공동 은행, 확실한 균원 경영 등과 같은) 과 빈곤 계층의 공동체로부터 나오는

대안들로부터 배워라. 이러한 사람들이 이끄는 주도권을 지원하고 반복하고, 적용하라.

(어린이)

1. ASEM의 모든 회원국들이 UN의 어린이 권리에 대한 협정을 인준하였음에 주목하고 모든 ASEM 정부들은 특히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의 나라에서 어린이, 특히 연약하고 취취당하는 어린이들의 권리를 증진시키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2. 비정부 조직, 시민 사회와 함께 ASEM은 제네바의 CRC 협의회에 의해 제안된 추천 사항들을 보다 확실히 준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일의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는 ASEM과 그 회원국들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3. ASEM 정부는 위험하고 남용적인,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교육, 복지에 해로운 모든 형태의 어린이 노동을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ASEM 정부는 어린이 노동에 대한 국제 기준(예를 들면 ILO 조약 138번)을 즉시 준수하고 Most Intolerable Forms of Child Labour 1998 (어린이 노동의 가장 용납할 수 없는 형태 1998)에 관한 ILO의 새로운 협약을 채택해야 한다.
5. ASEM은 위험하고 취취당하는 상황으로부터 구해진 아이들을 끝까지 도울 수 있는 특별 예산 라인을 만들도록 회원국들에게 즉시 촉구하여야 한다.
6. ASEM은 어린이 매매, 매춘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취취에 관련된 모든 단체에 대해 엄중한 기준을 채택하고 강화해야 한다.

(여성)

1. 사회에서 무급 노동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 보장이나 공공재 지급의 감소와 같은 구조적인 수정 정책을 피하라.
2. 임여의 여성 노동자를 위한 적절하고 지속적인 계획을 보장하라.
3. 여성 노동자들의 실업이 부당하게 많아지지 않도록 산업 재건설을 감시하라.
4. 여성과 아이들의 매매에 대해 효과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역내적인 그리고 쌍방의 장치를 만들어라.

* 이 성명은 1998년 3월 23, 24일 양일 간에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사회, 정치적 면에 대한 회의에 참가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100개 이상의 기관에서 온 참가자들에 의해 준비되고 승인되었다.